‘교복 담합’ 광주 33개 중·고교 수사대상

수사기관…교복 입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한 듯
광주 중·고교 대부분 교복 착용…수사 확대 될 듯

교복업체들의 입찰 전 담합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중·고교 수십개교가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역 33개 학교가 교복 입찰전 담합의혹 수사대상에 포함돼 관련 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급별로는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16개교 등 총 33개교로 파악되고 있다.

각 학교들은 수년 분량의 ‘교복 관련 입찰 결과 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보냈으며 각 학교가 교복업체 선정을 위해 구성하는 교복선정위원회 활동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복선정위원회는 교감·행정실장·교사·학부모·학생 등으로 구성돼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한 뒤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은 교복업체 선정과정에서 학교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체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지역에는 지난해 기준 중학교 91개교, 고교 68개교가 있다. 수사대상에 포함된 학교는 전체 학교의 20%이다.

중·고교의 교복은 지난 2014년부터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돼 각 학교가 기초금액(상한가 31만원~35만원)을 고시하면 2개 이상의 업체가 투찰가를 제시한 뒤 교복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저가 업체를 선정한다.

시교육청은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어 수사대상 학교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수사향방을 살피는 등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가 나라장터에 게시된 2023년도 중·고교 교복 개찰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94개교 중 46개교의 경쟁투찰가 차이는 300원~1만원 이하, 48개교는 1만1000원~8만6000원이었다.

전남은 94개 학교 중 87개교의 투찰 가격 차이가 ‘200원~1만원 이하’였으며 나머지 7개교의 업체 간 경쟁 금액 차이는 1만2000원~4만9000원이었다.

담합의혹이 있는 학교의 교복가격은 30만원~40만원대 였지만 공정경쟁 추정학교는 10만원~20만원대로 나타났다.

또 광주는 입학준비금, 전남은 교복비용으로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각각 9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2일 광주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 등지에서 입찰자료와 통신기록 등을 압수했다. 광주 교복 납품업체는 30여 곳으로 이 중 73%가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새학기 시작과 동시에 일부 학교가 교복 담합의혹과 관련한 수사대상에 올라 긴장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서 잘못된 관행이 뿌리 뽑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정순신 아들 전학 늦춘 ‘집행정지’…피해자 고통 막을 방법은?

집행정지 4번 중 1번 인용…8개월 간 전학 중단
시간 끌기 방지법 발의…“인력보강 먼저” 지적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학폭) 사태로 열렸던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를 계기로 학폭 조치에 불복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사안 처리를 늦추는 문제를 제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군 사건에서 드러났듯 학교 측이 집행정지 인용을 이유로 가해자를 전학 보내지 않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12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 정군은 2018년 6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위)가 전학을 처분한 지 약 8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민족사관고(민사고)에서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간다.

정군 사건 판결문과 민사고 측 설명 등을 종합하면, 정군 측은 2018년 6월부터 징계에 불복하는 집행정지를 잇달아 냈다.

2018년 6월 민사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해 7월 춘천지방법원에 학폭위를 상대로 전학 처분 등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와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한 달여 뒤인 2018년 7월 취하했고, 1심 법원에서는 소 제기 두 달여 만인 같은 해 9월 집행정지와 본안소송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정군 측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낸 상태였고, 2018년 7월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민사고 측은 그해 8월 강원도청으로부터 인용 사실을 통보 받아 정군을 전학 보내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정군 측이 낸 행정심판 본안은 2018년 12월 기각됐다. 앞서 같은 해 9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고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였다. 항소심 집행정지 신청은 그해 10월, 본안소송은 2019년 1월 각각 기각됐다.

정군 측은 2심 패소 직후인 2019년 1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다만, 민사고에 따르면 정군은 20여일 뒤인 그해 2월 전학 의사를 학교에 알리고 절차를 밟았다.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앞서 9일 국회 교육위에 나와 “학교는 분리조치를 위해 전학조치를 처음 결정했다”며 “그 내용을 최대한 지키려고 했지만 많은 법적 조치들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물론 학폭위 조치 확정(2018년 6월29일)과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7월26일) 사이 한 달, 그리고 같은 해 1심 행정소송 판결(9월4일)이나 행정심판 기각(12월) 이후 민사고가 정군을 전학 시키지 않은 점에는 의문이 남아 있다.

민사고 측은 학폭위 조치 확정 직후 다른 징계 조치(서면사과·교내봉사 40시간·출석정지 7일·특별교육 10시간)를 먼저 마치기 위해 전학을 보내지 않았고, 그 사이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해명한다.

또 행정심판이 기각됐다는 결과 등은 안내 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민사고는 지난 10일 자료를 내고 “학교에게 심판이나 소송의 결과를 즉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관계 기관의 업무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폭 가해자 측이 징계 조치에 불복해 내는 집행정지는 최근 인용률이 꽤 높아 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불복절차 관련 학교폭력 집행정지 신청건수 및 인용건수’를 보면, 2020년~지난해 8월 말 가해자가 낸 집행정지 총 1405건 중 57.9%인 813건이 인용됐다. 이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모두 합한 수치다.

정군 측은 행정소송 3심까지 포함해 징계 절차의 이행을 멈춰 달라며 총 4차례의 집행정지와 1차례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단 1차례만 인용됐지만 결과적으로 강제전학을 8개월 늦출 수 있었던 셈이다.

민사고 측도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에서 행정소송 1심 결과만을 받은 상태로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이라며 “피해 학생과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더욱 힘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군 사건이 극히 이례적으로 소송이 빨리 끝난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활동했던 학폭 전문가 한아름 변호사(법무법인LF)는 “정군 사건은 1심이 2개월 만에 끝났지만 요즘은 1심만 1년 걸린다. 첫 재판이 4개월 안에 열리면 다행”이라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인력 풀(상시 지원자 명단)이 너무 적어 사건을 다 소화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국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다. 가해자와 보호자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제기하면, 위원회는 심리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자와 보호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송으로 인한 ‘시간 끌기’를 막기 위해 재판 기간 강행규정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 예로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전(前)심 선고 이후 3개월 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물론 이런 강행규정에 대해서는 반론이 많다. 학폭 소송이 크게 늘어나 심리에만 1년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쉽게 동의해 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가해자도 미성년자이니 만큼 속도를 내면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속도보다 어느 한 쪽 의견만 듣고 재판이 이뤄지는 맹점을 고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돕도록 인력을 보강하거나, 별도의 학폭 전문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아름 변호사는 “사건을 쳐내기에 급급한데 피해자를 불러 집행정지를 할지 말지를 물어본다, 이거 안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학폭을 맡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관리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업무를 넘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재환 기자

봄비 머금은 솔잎 비가 내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 소나무 솔잎에 빗방울이 맺혀있다.

광주 운암산 화재 7시간만에 완진…1명 화상

광주 도심 운암산에서 불이 나 7시간 29분 만에 꺼졌다. 산불로 50대 1명이 화상을 입고 임야 4ha가 탔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1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운암산에서 불이 나 산림 당국에 의해 7시간 29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50대 남성 1명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운암산 33ha 중 임야 4ha도 타거나 그을린 것으로 추산됐다.

연기가 확산하면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진화 작업엔 공무원과 소방대원 1100여 명, 헬기 5대, 장비 59대가 동원됐다.

서선옥 기자

완도소방, 소방차 길터주기·봄철 산림화재 예방 캠페인 실시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10일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와 한 해에 일어나는 임야화재의 절반이 집중발생하는 기간(2월~4월), 봄철 산림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무안소방, 현경면 남·여 의용소방대와 주택화재 예방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현경면 남·여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관내 취약계층을 찾아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담양소방,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준비 구슬땀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올해 6월에 개최될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양소방, 봄철 다중이용시설 불시 화재안전조사 실시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꽃구경을 떠나는 행락객이 늘어나매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도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 기자

여수해경,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천에 앞장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 운동을 펼쳐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 기자

나주경찰,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예방’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 왕곡파출소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등) 예방을 위해 관내 마을회관 및 노인당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 기자